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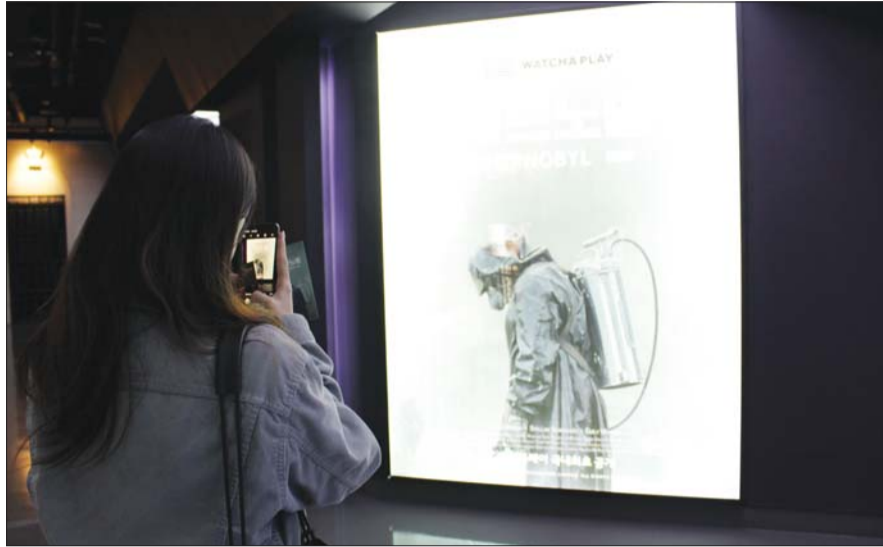
‘OTT관할’ 방통위·문체부 다툼에, 과기부도 슬며시 손가락

정부 부처간 OTT 주도권 싸움
OTT사업 진입 관련 신고제는 유지
외국인 간접투자제한 등 규제 완화

최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을 둘러싸고 방통위·문체부 등 정부 부처간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오히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내에 OTT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넣으면서 선제적으로 나섰다. 왓차·웨이브·티빙 등 OTT 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법적 지위를 재분류했지만, 규제 최소화 원칙을 지키기 위해 OTT 사업 진입 관련 신고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미디어 등 새로운 시장창출을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등 통신서비스의 부정사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31일 입법예고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그동안



‘체르노빌’ 포스터.

/왓차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나 ‘넷플릭스 규제법’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개정안은 OTT 지원 관련 법령 정비,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완화, 대포폰 요건·정의 명확화 및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제한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세제 지원(기재부), 자율등급제 적용(문체부) 등을 받는 OTT 사업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신규 진입이나 관련 사업자간 인수합병(M&A)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 및 혁신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간접투자

제한 및 통신사업자 겸업승인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23개국), 캐나다, 호주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49% 초과 소유를 허용(KT, SKT 제외)해 왔으나, 이러한 예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 회원국에 확대해 선진국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자본 유입 등 부작용에 대비해 공익성심사 단계에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뒀다.

또 겸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판단기준을 기존 ‘매출액’에서 ‘전기통신매출액’으로 변경, 전년도 전기통신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한 사업자만 겸업승인을 받게 했다.

또한, 현재는 기간통신사업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사업시작을 연장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등 장기적이며 불확실한 사유에 대비해 연장횟수 제한을 폐지, 사업자들이 물리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때 사업을 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을 통해 타인명의 이동전화 단말(대포폰)을 통한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 강화에 나선다. 대포폰 요건을 이전 ‘자금의 제공·유통이 있었던 경우’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까지로 변경해 규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업자들이 발신번호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더욱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OTT 관련,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율등급제 및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적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과기정통부도 법제도 정비와 함께 정책적 지원사항 등이 손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윤정 AI 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기업 부담 가중”

FKI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정안 검토·경제계 의견 반영 건의
자회사, 모회사 때문에 소송 가능성
감사제도, 경직적으로 운용 예측

전국경제인연합회가 9월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 정무위원회, 법사위원회에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신중 검토와 경제계 의견 적극 반영을 건의했다. 지난 6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제계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25일 별도의 수정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도입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경제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특히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법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 선임, 3% 의결권 제한 규정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경련은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할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1%의 지분만 가지고도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 자회사는 출자도 하지 않은 모회사의 주주 때문에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시 상장사의

소송 리스크는 3.9배 상승하며, 자회사 주주의 권리 침해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안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들과 권리와 의무가 동일한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임하게 되면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대주주의 결권이 제한돼 자본다수결 원칙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또 3% 의결권 제한규정을 도입할 경우 최대 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무기로 해 지펀드들이 마음대로 감사위원을 선임해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 포함 감사위원의 수를 전체적으로 축소하거나 감사위원회제를 상근감사제도로 전환하는 등 감사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양성운 기자 ysw@

부도어음 7900억… “매출채권 시스템 필요”

약 10년간 부도금액 38조5359억

7593억원 순이었다.

올해 들어 160개 업체가 발행한 7883억원에 달하는 어음 부도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소기업이 어음으로 결제한 판매대금 조기 회수 차원에서 매출채권을 현금화해 유통·거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1일 공개한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9년 7개월간 어음 교환에 따른 부도 금액은 38조 5359억원(7241개 업체)이다.

지역별로 서울(25조6346억원)과 경기(4조4940억원) 등 수도권에 이어 ▲부산 1조5495억원 ▲광주 9286억원 ▲경남 8861억원 ▲대전 8802억원 ▲인천

이광재 의원은 “기업 간 거래에서 발행하는 어음 및 외상 매출금 등 매출채권 회수 지연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부도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중소기업 최대 애로인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수취기일)이 어음인 경우 제조업이 평균 107.4일, 서비스업이 평균 120일에 달하는 점에 대해 고려한 발언이다. 이에 이 의원은 어음·외상 등으로 결제한 중소기업 판매대금 조기 회수 차원에서 ‘매출채권 유통화’로 유통·거래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원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매출채권 일정 비율에 대해 투자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코트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비전 수립… 디지털 전환 첫발

KOTRA(코트라)가 9월부터 ‘디지털 전환’에 나선다.

코트라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 전환으로 무역·투자 진흥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비전을 수립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코트라는 ▲새로운 고객가치와 경험 창출 ▲새로운 사업 모델로 무역·투자 생태계 구축 ▲일하는 방식 혁신 등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정보를 찾고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국내 기업이 제품 정보를 입력하면



권형오 코트라 사장

수출 유망국가와 시장을 탐색할 수 있는 ‘무역·투자 빅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초부터 운영 중이며, 앞으로는 역량에 맞는 교역 파트너와 코트라 및 유관기관 서비스까지 추천하도록 확대한다.

아울러 온라인 기업 간 거래(B2B) 시장인 ‘바이코리아’를 개편해 화상상담

주선 시스템과 온라인 전시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키운다. ‘코리아’ 브랜드를 활용한 온라인 국제전시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유통망 입점을 지원하기 위해 ‘K-스튜디오’를 국내·외에 구축하는 등 새로운 사업도 선보인다.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민간 분야에서 제안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오픈 이노베이션형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서비스수행을 위해 외부 스타트업의 기술을 활용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짧은 주기를 반복하는 ‘애자일’ 조직 운영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청각장애인 위한 AI음성·자막 서비스

방통위, 음성·자막 자동변환 앱 개발

방송통신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이 모바일·인터넷 환경에서도 제약 없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음성-자막 자동변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음성-자막 자동변환 애플리케이션은 AI 기반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의 미디어 음성을 자막으로 자동 변환해 화면에 표시해주는 서비스로, 청각장애인의 동영상 시청 편의를 위해 방통위가 2019년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개발해왔다.

이번 시범 서비스에는 한국농어인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청각장애인 300명

이 참여하며, 안드로이드용 운영체제의 모바일기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탑재된 보도 프로그램(연합뉴스TV)을 휴대폰에서도 실시간으로 자막과 함께 볼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시범서비스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등 향후 상용화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장애인방송 및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국민 캠페인을 제작해 1일부터 방송될 수 있도록 132개 방송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캠페인은 시청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채윤정 AI 전문기자